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565호
2016. 6. 20

정책동향

- 건설공사 지체상금률 하향 조정 필요

시장동향

- 2015년 건설업 경영 분석
- 2016년 1~4월 건설 수주 역대 최고치 기록

산업정보

- 건설산업 혁신, 공공발주제도 개혁이 최우선

건설논단

- 혁신이 필요한 대한민국 건설산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건설공사 지체상금을 하향 조정 필요

- 현행 지체일수 1일당 1/1,000은 매우 과다, 외국은 2/10,000 이하가 보편적 -

- 현행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체상금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공사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1,0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음.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 금액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 계약 상대방이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 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 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보증 기관이 보증 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 설계 변경(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으로 준공 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해당 관급 자재의 조달 지연, 사급 자재 구입 곤란 등으로 지체된 경우

■ 지체 배상금은 발주자의 대금 지급 지연 이자액의 산출 방법과 상호 대칭 관계

- 일본의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 제45조를 보면, 수주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는 배상금 지불을 청구할 수 있음.
 - 지체 배상금 액수는 도급 금액으로부터 부분 인도를 받은 부분 혹은 완성형 부분에 상응하는 도급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지체 일수에 대해서 연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의 부분에는 예를 들면, 「정부계약의 지불지연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무장관이 정하는 지연 이자액 요율을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연 이자액 요율은 재무장관이 은행의 일반 대출 금리를 감안해서 결정하는 비율을 적용하는데, 2013년 이후 연 3%를 하회하고 있음.

● 「민간건설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 제24조를 보면, 을(乙)이 공사를 지체할 때, 갑(甲)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 대금의 최대 4/10,000 이내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

- 역으로 갑(甲)이 대금 지불을 지체하고 있을 때, 시공자는 도급 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체 배상금 요율과 동일하게 최대 4/10,000 이내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

● 중동이나 동남아 지역의 해외 건설공사에서 적용된 지체상금률을 보면, 대부분 0.01~0.04% 수준임.¹⁾

■ 지체상금률은 금융 기관의 평균 대출 금리에 부합되도록 2/10,000 이하로 조정 필요

● 일본의 사례를 감안할 때, 지체 배상금 산출 방법은 국가가 약정 지불 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의 지연 이자액 산출 방법과 상호 대칭되는 관계에 놓여 있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7항에서도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 지급 지연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를 보면, 발주자가 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 이자로 지급하도록 규정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공표하고 있는 예금은행 가중 평균 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의 평균치는 2015년 12월 기준 연 3.46% 수준임.

- 반면, 현행 건설공사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에 대응하여 1,0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간 대출 금리로 환산할 때, 36.5%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요율임.

●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지체상금률은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 최대 2/10,00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 요구됨.

- 한편, 시공자와 발주자의 책임이 복합된 동시 발생 공기 지연(concurrent delay)은 발주자가 간접비 보상을 우려, 공기 연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간접비 보상 없이 계약 공기 연장을 허용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

1) 김경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계약네트워크 발표 자료(2016..5. 27) 참조.

2015년 건설업 경영 분석

-영업이익 제자리, 매출액증가율 큰 폭 둔화, 2016년 우량 신규 수주 확보 중요-

■ 2015년 건설업, 수익성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제자리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5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건설업 수익성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호전된 양상을 보임.
 - 2014년 1.9%를 나타냈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2015년에는 2.4%로 0.5%p 상승하였으며,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0.9%에서 1.7%로 0.8%p 상승함.
 - 그러나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4년 2.7%이던 것이 2015년에는 2.6%로 오히려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2/4분기에 매출액영업이익률이 6.3%를 나타냈던 것에 비하면 2015년 영업이익률 수치는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2015년 국내 주택/부동산 부문이 호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2015년 영업이익률 수치는 공공공사나 해외공사 등 여타 공사에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함.

■ 지속적인 금리 하락에 기인하여 비용 관련 지표 개선

- 2014년 대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다소 하락하였고, 매출액증가율의 상승폭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보상비율 $[(\text{영업이익}/\text{금융비용}) \times 100]$ 과 금융비용비율 $[(\text{금융비용}/\text{매출액}) \times 100]$ 은 전년 대비 모두 개선됨.
 - 2015년 건설업의 이자보상비율은 198.0%로 전년 대비 8.0%p 상승하였으며, 금융비용비율은 1.3%로 전년 대비 0.2%p 하락함.
 - 이러한 비용지표의 개선은 저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2014년 10월 2.0%였던 기준금리를 2015년 3월 12일 1.75%로, 이어 6월 11일에는 1.5%로 두 차례에 걸쳐 인하함.
 - 그러나 건설업의 이자보상비율과 금융비용비율은 제조업(이자보상비율 612.4%, 금융비용비율 0.8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자보상비율과 높은 금융비용비율은 향후 금융기관의 산업 평가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건설업에 배분될 자금 한도 자체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전년 대비 성장성 지표 다소 악화, 특히 매출액증가율 둔화 주목해야

- 2015년 2/4분기에 전년 동기비 상승하였던 총자산증가율이 연말에는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매출액증가율도 전년 대비 하락하여 2016년 신규 수주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함.
 - 2014년 말, 3.2%를 나타내던 총자산증가율이 2015년 말에는 2.3%로 0.9%p하락하였으며, 매출액증가율 역시 2.4%에서 0.9%로 1.5%p나 하락함.
 - 신규 수주가 매출액으로 전환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2015년 말 매출액증가율 수치가 당해 연도 수주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 하더라도 전년 대비 비교적 큰 증가율의 하락 폭을 감안할 때, 2016년도에 신규 수주, 특히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률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우량 신규 수주 물량 확보가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사료됨.

■ 전년 대비 기업의 안정성 다소 악화. 신용등급 관리를 위한 적정 부채 수준 유지 필요

- 2015년의 경우 안정성을 나타내는 기초적인 지표인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모두 전년 대비 다소 악화됨. 최근 건설업이 5대 취약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안정성 지표의 관리가 요망됨.
 - 2015년 말 건설업의 자기자본비율은 37.1%로 전년 대비 1.3%p 하락하였으며, 부채비율과 이자부 부채를 나타내는 차입금의존도는 각기 169.4%와 24.7%로 전년 대비 9.2%p와 1.5%p 상승
 - 특히 2015년 핵심감사제도(key audit matters)의 도입으로 미청구공사액, 공사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등에 관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에 따라 향후 건설업체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신용 등급의 관리는 향후 회사채의 차환 발행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용 등급 관리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안정성 지표들을 보다 신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1> 건설업체 주요 경영지표 추이

(단위 : %)

구분	성장성		수익성			비용성		안정성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이자보상비율	금융비용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건설업	2014 말	3.2	2.4	0.9	2.7	1.9	190.0	1.5	38.4	160.6	23.2
	2015 말	2.3	0.9	1.7	2.6	2.4	198.0	1.3	37.1	169.4	24.7
제조업	2015 말	2.8	-4.2	5.3	5.4	6.4	612.4	0.89	57.7	73.2	21.7

자료 : 한국은행(2016.5.27), 2015 기업경영분석(속보).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2016년 1~4월 건설 수주 역대 최대치 기록

- 공공이 부진하였으나, 민간의 토목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 2016년 1~4월 국내 건설 수주, 기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4.2조원 기록

- 대한건설협회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동향조사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건설 수주는 지난해와 같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하는 등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임.
 - 1~4월까지 전년 동월비 증감률 -14.4% → 36.6% → -8.3% → 10.9% 기록
 - 지난 2015년에 1~12월까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해 연간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158.0조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상승 기조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판단됨.
- 비록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여도, 올해 1~4월 건설 수주는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4년 이래 기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4.2조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월 수주 평균보다 대략 10조원 이상 높은 실적이며, 또한 금융위기 이전에 가장 높았던 2007년 1~4월 수주액 33.7조원보다도 월등히 높은 실적임.
 - 특히, 공공이 12.0% 감소한 상태에서 민간 부분이 11.2% 증가하였는데, 민간 부분이 매우 양호한 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 1> 최근 국내 건설수주 추이

(단위 : 전년 동기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5	1/4	41.7	-13.4	-11.9	-17.7	-11.9	-18.9	102.2	111.2	101.2	158.8	30.5
	2/4	54.7	33.2	75.6	-23.7	-30.3	-21.2	67.1	-21.3	81.5	70.6	99.3
	3/4	49.0	-0.9	-6.9	7.7	92.1	-26.4	66.6	329.0	47.7	49.3	44.9
	4/4	42.3	19.4	53.9	-13.5	-16.5	-11.0	56.9	44.4	59.5	62.8	54.2
	연간	47.0	9.8	25.0	-13.1	-1.8	-18.6	69.7	80.9	68.1	74.5	58.1
2016	1월	-14.4	1.1	-18.7	89.0	1072.9	11.2	-21.6	150.1	-27.0	-37.5	-7.8
	2월	36.6	-4.8	-38.3	106.4	1732.1	-4.7	63.7	-34.5	93.8	67.9	136.1
	3월	-8.3	-3.8	-25.3	50.9	174.9	-8.6	-10.1	44.4	-15.9	-35.9	57.5
	4월	10.9	-39.4	-38.0	-43.2	-47.0	-40.9	34.2	124.0	30.2	45.5	7.0
	1~4월	3.8	-12.0	-30.0	43.9	217.3	-10.8	11.2	27.5	9.5	-3.4	37.0

자료 : 대한건설협회.

■ 1~4월 공공 수주 새로운 입찰제도 도입으로 발주 지연, 전년 동기 대비 12.0% 감소

● 2016년 1~4월 동안 공공 수주는 전년 동기비 12.0% 감소한 12.0조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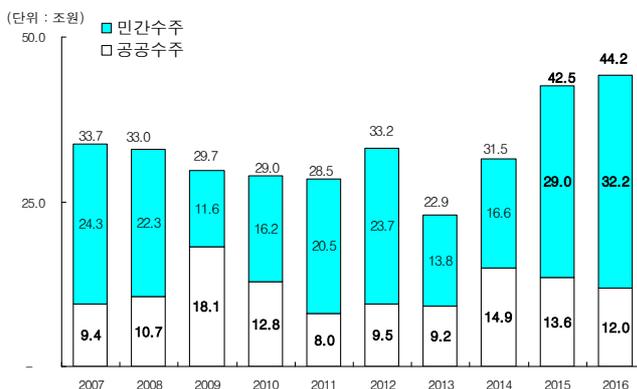
- 1~4월 공공 토목 수주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 공사의 발주가 늦어 진데 따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 감소한 7.2조원 기록
- 공공 주택 수주는 지난해 수주가 부진한 기저효과 영향도 있지만, LH공사 및 지방 공사의 발주 증가로 217.3% 급등한 2.5조원을 기록함.
- 반면, 비주택 건축 수주는 10.8% 감소한 2.2조원으로 부진한 모습임.

■ 1~4월 민간 수주 비주택 건축과 토목이 양호,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

● 1~4월 민간 수주는 기간 대비 역대 최대치인 32.2조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함. 지난해 활발했던 주택 수주가 감소했으나, 민간 비주택 건축과 토목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토목 수주는 최근 4년간 가장 양호한 3.4조원을 기록, 전년 동기비 27.5% 증가
- 지난해 상승을 도모한 민간 주택 수주는 최근 재건축 수주가 부진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17.3조원을 기록함. 비록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어도 수주액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아 실적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비주택 건축 수주는 1~4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11.5조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7.0% 증가함. 저금리 환경 가운데 오피스 및 상업용 건물 수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연도별 1~4월 전체 수주 비교



<그림 2> 연도별 1~4월 민간 수주 비교



박철한(책임연구원:igata99@cerik.re.kr)

건설산업 혁신, 공공발주제도 개혁이 최우선

- 건설업계 및 공공 발주기관,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건설사업의 비효율성 증가'와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 심화' 등이 가장 큰 문제

- 건설업계 및 공공 발주기관이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로 '공사비 및 공기 증가 등 건설사업의 비효율성 증가(39.2%)',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 심화(19.4%)', '담합, 체불 등 불법과 비리 지속(16.6%)' 을 지적
 - 그러나, 건설업계와 공공 발주기관의 시각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건설업계가 '공사비 및 공기 증가 등 건설사업의 비효율성 증가' 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발주기관들은 '담합, 체불 등 불법 및 비리의 지속'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

<표 1> 설문 응답 그룹별 건설산업 현안에 대한 인식

순위	대형 건설업계	중소 건설업계	발주기관
1순위	건설사업의 비효율성 증가(62.0%)	건설사업의 비효율성 증가(44.6%)	담합, 체불 등 불법, 비리 지속(36.0%)
2순위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 심화(20.0%)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 심화(31.3%)	건설사업의 비효율성 증가(23.4%)
3순위	기술 혁신 부족(8.0%)	건설산업 내 업역 간 이해관계 충돌(14.3%)	기술 혁신 부족(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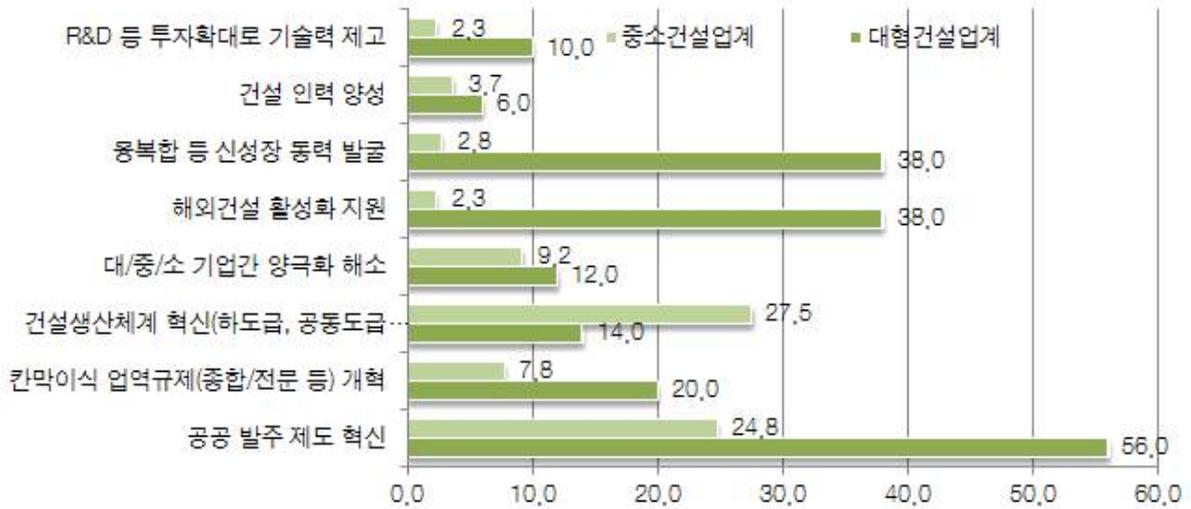
- 건설 정책 및 제도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건설업계가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공공 발주기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설 정책·제도를 보는 시각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건설산업 혁신, '공공 발주제도 개혁' 노력이 가장 중요

- 건설업계 및 공공 발주기관들은 건설산업의 혁신 과제로서 '공공 발주제도 혁신(27.0%)' 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다음으로 '건설 생산체계 혁신(18.4%)',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 해소(13.9%)', '칸막이식 업역 규제 개혁(10.0%)' 순임.
 - 건설기업 규모별로는 혁신 과제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공 발

주제도 혁신' 다음으로 '해외건설 활성화 지원(38.0%)'과 '융복합 등 신성장 동력 발굴(38.0%)'을 제시한 반면, 중소 건설업계는 '건설 생산체계 혁신'을 제1의 혁신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그림 1> 건설산업 혁신 방향에 대한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의 의견 차이 (단위 : %)



- 또한, 공공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간에도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여 건설업체가 '건설 생산체계 혁신(24.6%)'과 '칸막이식 업역 규제 개혁(9.9%)'을 제시한 반면, 공공 발주기관들은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 해소(18.9%)'와 'R&D 등 투자 확대로 기술력 제고(14.0%)'를 지적

- 인력 감축, 사업 부문의 조정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4.7%와 필요하다 47.6%)는 의견이 응답자의 62.3%를 차지
 - 특히, 대형 건설업체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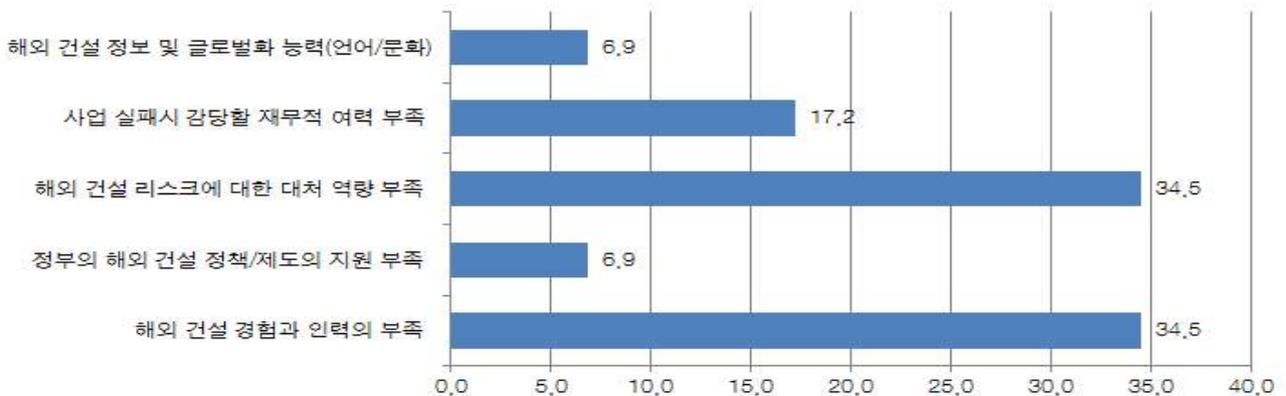
■ 중소 건설업체, 68.7%가 '분리 발주 확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

- 공공 발주기관들이 건설산업의 정책·제도의 입안 및 실행, 그리고 실제 사업 실행 단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감사제도'와 현행 '가격 위주의 입·낙찰제도' 그리고 '투입 공사비의 부족에 따른 문제'를 지적
-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최근 변화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있어 대형 건설기업의 기능과 역할 확대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32.0%)'와 턴키 및 CM at risk 등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는 발주정책 강화(24.0%)' 그리고 '대형 건설기업이 전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의 도입(14.0%)' 순으로 제시

- 중소 건설업계는 최근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에 이어 기계·설비 공사까지 추진되고 있는 분리 발주와 관련하여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8.7% 차지
 -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1.6%에 불과
- 중소 건설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 관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39.3%를 차지하였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4.8%, 필요하지 않다(매우 필요하지 않다 3.6%, 필요하지 않다 22.3%)는 의견도 25.9%를 차지하여 해외 시장 진출 필요성에 대하여 중소 건설업계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중소 건설업계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해외 건설 경험과 인력의 부족(34.5%)’ 그리고 ‘해외 건설 리스크에 대한 대처 역량 부족(34.5%)’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

<그림 2> 중소 건설업계가 해외 건설 시장 진출에 소극적인 이유

(단위 : %)



■ 건설산업 혁신 방향과 과제 설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용 필요

- 건설업계 및 공공 발주기관 모두 공공 발주제도의 혁신은 가장 중요한 혁신 과제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고, 또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혁신 과제 설정에 있어서는 대형 건설업계와 중소 건설업계의 인식 차이가 있고,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산업 차원의 과제 도출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 결국,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설정에 있어서 건설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이며, 구체화시키는 단계에 있어서는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교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일반 국민, 건설산업의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9%가 동의

- 향후 건설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함. 반면에 발전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24%만 동의함.

■ ■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건설산업 혁신이 필요한 이유로는 “건설사업의 비효율 개선을 통한 세금 낭비 최소화(27.7%)”, “일자리 창출 선도(26.7%)”를 가장 높게 거론

- 다음으로 “기후 변화 대비 및 노후화된 도시와 시설의 문제 해결(18.9%)”, “국가 경제 기여(13.2%)”, “낙후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11.9%)” 순으로 조사됨.

<그림 3> 국민이 생각하는 건설산업의 혁신 이유

(단위 : %)



■ ■ 일반 국민 85.1%가 노후시설 개량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 확대 찬성

- 국민은 “담합 및 정경 유착 등 부정부패/비리(37.4%)”, “부실공사 및 사고(32.9%)”를 건설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
-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최석인(기술정책연구실장 · sichoi@cerik.re.kr)·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혁신이 필요한 대한민국 건설산업

그들은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한다. 전기 자동차도 만들지 못한다. 요즘 유행하는 딥러닝 인공 지능과도 거리가 멀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에게 혁신하라고 말한다.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혁신은 잘 맞지 않는 옷과 같다고 말한다. 과거 국가 경제의 압축 성장기를 견인한 주요 산업이었고, 지금은 고용 창출과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란다. 혁신하란다.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 미칠 노릇이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현재의 그들 모습 속에서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없다. 그들은 바로 ‘한국 건설산업’이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스티브 잡스는 “혁신만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다. 이런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 여전히 살아 있는 애플은 보스틴 컨설팅 그룹이 조사한 2015년 글로벌 50대 혁신 기업 순위에서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혁신 기업이라고 하면 IT 또는 자동차 등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떠오르지만 50대 혁신 기업 중 12개 사는 카드 또는 보험 등의 비기술 분야 기업이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은 비기술 분야일까 아니면 기술 분야일까?

건설산업은 생산성 제고와 품질 및 성능 개선 등을 위해 첨단 기술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 집약형 산업이다. 동시에 산업의 생산구조와 방식을 결정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업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건설산업의 혁신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발주자와 공급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설산업 혁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대표적인 글로벌 성공 사례로 우리에게 익숙한 영국의 건설산업 혁신운동을 살펴보자. 영국은 건설산업 혁신의 시작을 정부를 포함, 산업 참여자들 간의 상호 협력에서 찾았다. 영국 건설산업 혁신 운동의 시초로 평가받는 1994년 발표된 레이썸 보고서(Constructing the Team)와 1998년 이간경의 보고서(Rethinking Construction)는 공통적으로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첫걸음은 산업 주체들 간의 협력이 근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주체들 간의 협력의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내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지난 노력들은 산업 주체들 간의 목표 공유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국내 건설시장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낮고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위협받는 지금, 건설산업 혁신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서 한국 건설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함께’ 고민을 시작해보자. <건설경제, 2016. 6. 7>